

한중수교 이후 한국 언론의 대중(對中) 담론 연대기*

주재원(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논문요약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밀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쳐왔고,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력한 국가다. 특히 미국과 더불어 세계시장을 양분하는 패권국가로 급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對)중국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19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정점이었던 2020년까지 보도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총 네 일간지의 사설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하였고, 정권별 언론사의 논조 변화 흐름과 이슈에 대한 담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정권과 정세, 각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대중(對中)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큰 틀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정치·외교·이념적으로는 경계해야 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제어 : 중국, 한중관계, 국제뉴스, 대중국 인식, 담론, 논조, 보도 경향, 재현

* 이 논문은 2021년도 한동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연구 과정에 도움을 준 한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남궁재원, 신민선, 황석준 졸업생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허윤철 사무국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I. 문제 제기

2019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을 야기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이라는 정식명칭을 공표하기 이전까지는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우한시의 이름을 붙여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는 주로 우한시에 다녀온 사람들만이 경계의 대상이 되었으나,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중국인들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었고, 이는 중국인 혐오를 넘어 아시아인 혐오로 확산하였다. 국내에서도 중국인 혐오 담론이 기승을 부렸는데, 당시 제1야당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였으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76만여 명이 참여했다.¹⁾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을 통해 중국이라는 국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었고, 외교적 동맹으로서의 미국과 경제적 최대 교역국으로서의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에 비견될 정도로 커졌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등을 둘러싼 남북문제에 있어 핵심적 중재자 위치에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한국으로서는 공조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5대 강대국의 힘의 균형점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있는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 전략에 이용되지 않으면서도, 자주적 외교를 계획함에 있어 합리적인 대중국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19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됐지만, 한국은 과거 한국전쟁의 적대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고, 사안에 따라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1) “76만 명이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답변 외면한 靑, 입국 금지 여전히 부정적.” 『조선일보』, 2020년 2월 24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0193.html(검색일:2022.10.10.).

실리를 추구하는 이중적 관계를 이어왔다. 이러한 점은 대북 관계, 탈북민 문제, 동북공정, 사드 배치 등의 다양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경제협력과 교류는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추구해왔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대중(對中) 인식 역시 이중적이다. 점차 증가하는 중국경제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필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지만, 반공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차이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 또한 공존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간 한국 언론이 중국에 대한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어떤 프레임으로 사회적 담론을 생산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까지 정권별로 주요 언론을 통해 생산된 중국 관련 담론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언론사별 정치 성향과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술적 시도는 한국 사회가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대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II. 선행 연구

1. 뉴스 보도와 매개된 국가

현대사회에서 담론 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매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현실 인식과 사회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실천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중매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중 대중의 인식구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의제 설정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형태는 단연 뉴스매체일 것이다. 버거와 루크만²⁾은 미디어의 ‘현실의 사회구성

2) Berger, P. L.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개념을 들어 미디어가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건은 재해석되며, 수용자는 뉴스매체에서 제공하는 방향성에 따라 사건을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뉴스매체가 커뮤니케이션의 대상과 이슈의 특정 측면들을 선택과 배제를 통해 재구성하고,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은 공중의 지각과 인지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론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³⁾ 이는 각 언론이 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기계적으로 사실 정보만 나열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 지향과 이념에 기반한 해석을 첨부하여 수용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언론사가 보도하는 내용은 해당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들의 인식구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교류의 범위가 전 지구촌으로 확대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집단을 제외한 다른 사회, 집단과는 직접적인 교류나 접촉을 하기 어렵다. 정보의 출처가 한정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단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대중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외부 집단이 중국과 같은 외국일 경우에는 언론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하나의 상상된 공동체로서 지정학적인 관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념들, 그리고 물역사적 또는 정치적 순응 등의 복합적인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형성된다는 이장환 외⁴⁾의 주장을 고려했을 때, 특정 국가를 재현하는 과정에 있어 언론보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주재원⁵⁾ 또한 해외에 대한 직접적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대중매체를

knowledge. New York: Anchor Books, 1966.

- 3) 최원석·반현, “공중 의견과 행동에 대한 의제설정 효과 모형의 검증.” 『한국언론학보』 제50권 1호, 2006, p. 406.
- 4) 이장환·고성훈·김성해, “언론에 재현된 ‘동아시아’ 담론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기획연재를 중심으로.” 『담론 201』 16권 2호, 2013, p. 195.
- 5) Joo, Jaewon,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discrimination: The representation of migrants in the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news.”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Vol. 24, No. 2, 2015, pp. 213~231.

통해 외국이 묘사되는 방식은 대중들의 세계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시각각 보도되는 국제뉴스는 외국으로서의 특정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 국가사회의 ‘표상(表象)’을 재현(represent)하고 이를 하나의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⁶⁾ 그동안 언론학에서 논의된 국제뉴스의 타 국가사회 보도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뉴스의 왜곡된 국가 재현의 문제다. 재현은 현실 그 자체일 수는 없으며 일정한 편향을 지니게 된다. 사이드(Said, E)는 영국 소설가 조셉 콘래드(Conrad, J)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중동이라 부르는 동양에 대한 묘사가 서양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를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 정의했다.⁷⁾ 나아가 사이드는 현대 미국 언론의 이슬람 보도를 분석하여 이를 악마화(demonology)라고 규정하였다.⁸⁾ 오리엔탈리즘 개념을 통해 미디어의 국가 또는 민족 재현을 분석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샤heen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아랍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타자로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⁹⁾ 국내에서는 황인성이 2003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발발한 시기를 대상으로 KBS의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여 국내 주류 방송이 CNN과 Fox News 등 미국 언론이 제공하는 영상 자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을 대표하는 부시와 ‘악’을 상징하는 후세인의 전쟁이라는 서구적 시각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고 결론지었다.¹⁰⁾ 또한 박선미는 국내외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분석 등을 통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국

6) Joo, Jaewon, Ibid. pp. 213-231.

7)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2000, pp. 215.

8) Said, Edward, *Covering Islam: How the media and the experts determine how we see the rest of the world*. New York: Pantheon Books, 1981.

9) Shaheen, Jack, *Reel bad Arabs: How Hollywood vilifies a people*. Northampton: Interlink Publishing, 2012.

10) 황인성, “텔레비전의 마이라크 전쟁 보도와 미국식 오리엔탈리즘: KBS 텔레비전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8권 3호, 2004, p. 144-167.

면이 오리엔탈리즘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환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¹¹⁾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서양은 문명의 중심이고 동양은 야만적이라는 인식이 서구 언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과 시민들의 인식에도 깊숙이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비서구권의 국가들 역시 서구적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퇴조하는 듯한 오리엔탈리즘이 코로나19와 전지구적 공포 앞에서는 다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두 번째 논점은 국제뉴스의 특정 국가사회에 대한 과도한 ‘범주화’와 ‘일반화’의 문제다. 인간의 언어와 사고 체계는 대상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개념으로 묶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차이와 다양한 사정은 무시되기 쉽다. 뉴스매체의 보도는 특히 복잡한 현상과 상황을 단순화하여 빠르게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 사건이나 현상 속에 존재하는 복잡한 맥락과 다양한 요인들을 균질화하여 특정한 스테레오타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윤주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연합뉴스의 멕시코와 브라질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였는데, 멕시코 관련 보도는 범죄 관련 이슈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브라질 관련 보도는 경제 이슈가 주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한국 언론이 특정한 국가에는 특정 분야의 기사만 다루거나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¹²⁾ 이를 박윤주는 ‘미디어 모노컬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식민지형 농업에서 한 국가에 한 가지 작물 경작만을 강요한 것처럼 한국 언론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보도는 특정한 분야의 기사만 과도하게 다루는 경향을 확인한 것이다.¹³⁾

범위를 넓혀보더라도 국제뉴스에서 각 지역/국가를 다루는 방식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이터(Reuters)의 보도를 분석한 창은 통

11) 박선미,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읽다.”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9권 4호, 2020, p. 251-272.

12) 박윤주, “미디어 모노컬처와 오리엔탈리즘: 한국 언론의 라틴아메리카 보도 행태 연구.” 『중남미연구』 제32권 2호, 2013, p. 139-162.

13) 박윤주, 위의 논문, p. 158.

신사 뉴스에서 유럽과 미국의 소식이 대다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이슈로 다루어지는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뉴스는 주변적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⁴⁾ 국내 4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국제뉴스를 분석한 오대영 역시 미국과 유럽에 관한 보도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 아시아 뉴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¹⁵⁾ 국내 언론들 역시 극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관한 국제뉴스에서 서구 미디어를 핵심 정보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서구 중심적 보도 편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장과 동료들은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시위 운동인 이른바 ‘아랍의 봄’에 대해 미국의 AP통신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혁명적 과정으로 보도했지만, 중국의 신통화통신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권위와 안정에 도전하는 위기 사태로 평가하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¹⁶⁾ 호로비츠와 페프리는 특히 적대 국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정파(partisan)적 미디어 재현과 이념적 정체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¹⁷⁾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0여 년간 중국은 한국에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상대국으로 떠올랐으며 한국 언론은 중국에 대한 뉴스를 활발하게 보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냉전체제 이후 작동하고 있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중국을 보도하는 방식은 양극화되었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양상 역시 시시각각 변화해왔다. 따라서 한중수교 이후 3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 언론이 중국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해 왔으며 그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미디어학적 의미뿐 아

14) Chang, Tsan-Kuo, "All countries not created equal to be news: World system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25, No. 5, 1998, pp. 528-563.

15) 오대영,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양상의 차이와 이유 연구: 뉴스주제, 보도량, 보도태도, 미디어 정보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61호, 2013, pp. 74-97.

16) Jiang, KE, George, Barnett, and Laramie, Taylor, "Dynamics of culture frames in international news coverage: A semantic network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0, 2016, pp. 3710-3736.

17) Hurwitz, Jon, and Mark, Peffley, "Public images of the Soviet Union: The impact on foreign policy attitude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2, No. 1, 1990, pp. 3-28.

나라 국제관계학적 측면에서도 연구 가치가 있다.

2. 한중관계와 한국 사회의 대중(對中) 인식

한중수교 이후 한국 언론이 재현한 중국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중수교 이전 한국과 중국이 쌓아온 외교적 관계의 맥락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중(對中) 인식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맺어왔다. 조선 시대까지 중국은 대체로 조공책봉 관계에 기초한 사대 외교의 대상이었다.¹⁸⁾ 하지만 1840년 발발한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과 그로 인한 난징조약을 계기로 아시아 대륙의 질서는 급격히 재편되었고, 중국은 이웃 국가들과 함께 서구 열강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강제 편입되었다.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이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침략한 시기를 거치며 양국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힘을 합쳐 저항하는 일종의 민간차원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¹⁹⁾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 및 한국의 해방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양분되었고, 중국이 중화민국(이하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으로 분리되면서 동북아는 냉전체제에 편입되었다. 특히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중국에 대한 한국 내 적대적 정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냉전체제 하에 상호 간 오랜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²⁰⁾ 따라서 1980년대 말 구소련이 몰락하고 19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되기까지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적대 국가로 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한중수교 당시 중국은 시장개방이라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낙후한 국가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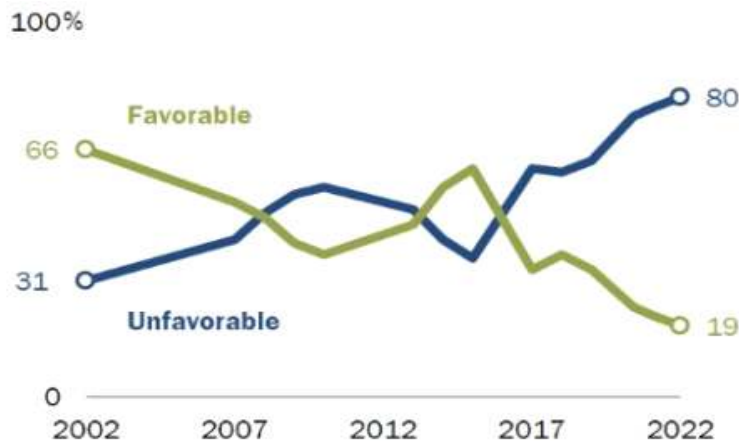
18) 배경한, “역사로 보는 한중 관계.” 『지식의 지평』 제9호, 2010, pp. 136-152.

19) 김진호, “근현대 한국인의 중국 인식(認識)과 중국인의 한국 인식변화.” 『중국문화연구』 제8호, 2006, pp. 373-398.

20) 장영태·양철, “한중수교 당시 국내 인식에 관한 연구: 1980~1990년대 국내 언론의 사실과 삽화 분석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4권 4호, 2017, pp. 75-106.

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과 국제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강대국(G2)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한중 양국 교류가 확대되면서 정치·경제적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대중국 인식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화해온 것으로 나타난다.²¹⁾ 아래 <그래프 1>은 2002년 이후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서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한국인들의 대중국 인식은 전반적으로 특정 외교·경제·문화 이슈에 따라 등락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만큼 대중 인식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히 단기간에 등락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언론매체 보도와 같은 시의성 있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인들의 대중 호감도(Favorable)/비호감도(Unfavorable) 변화 추이



출처: PEW Research Center Survey 2022²²⁾

21) 차정미,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한 이념의 영향,”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pp. 46-80.

22) 유상철, “중국 비호감도 사상 첫 80% 돌파” 『중앙일보』 2022년 7월 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097#home> (검색일: 2022.12.9.).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국내 언론이 중국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특정한 시기나 사건을 중심으로 국내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를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왕천·서상호는 2009년 한 해 동안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를 대상으로 중국 관련 보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정치·외교·경제·무역 등 특정 분야에만 보도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²³⁾ 특히 한반도 문제 및 미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보도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제품의 저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활발하였다. 그에 비해 문화·교육·과학·기술 등에 관한 보도는 매우 드물었다. 즉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 대상이자 새로 부상하는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중국은 부각된 반면, 소통해야 할 사회·문화적 교류의 대상으로서의 중국은 부재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서옥란·오창학 역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조선일보의 중국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한국의 주요 신문이 중국을 국가와 시장으로서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²⁴⁾ 2010년대에 들어 국내 언론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크게 늘면서 중국은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영옥 외²⁵⁾는 2011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국내 열독률 상위 5개 일간지의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 프레임인 인위적 원인, 중국 원인, 개인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폈다. 분석 결과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로 분류한 신문의 67.8%, 진보로 분류한 신문의 54.7%가 ‘중국 원인’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62.5%가 중국의 산업 발전과 그로 인한 사막화와 스모그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보면서 이른바 ‘중국 원인’ 프레임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무관하

23) 왕천·서상호, “한국 텔레비전 뉴스의 중국 관련 보도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4호, 2012, pp. 141-159.

24) 서옥란·오창학, “한국 언론에 그려진 중국 이미지 연구: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한중언론학연구』 제46호, 2015, pp. 277-303.

25) 김영옥·이현승·장유진·이혜진, “언론은 미세먼지 위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미세먼지 위험보도 프레임과 정보원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9권 2호, 2015, pp. 121-154.

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드 문제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인해 대중국 보도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 기사는 대부분 북경 특파원과 산업·경제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정치·외교와 경제·무역 이슈에 보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리하자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밀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및 경제·문화적으로도 매우 긴밀하게 얽혀있는 관계다. 그동안 국내 언론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도하고 어떠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핀 연구들이 이어져 왔으나 대부분 특정 사안이나 기간에 국한된 것들로, 이를 연대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수교 이후 30여 년간 한국 언론이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보도해 왔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인식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격랑의 국제 정세 속 점차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과 대중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해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확신한다.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 언론보도의 정형성과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요 4개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의 사설을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해당 4개 일간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한국 사회와 언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보수/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언론사로 자주 거론되는 언론사들임을 고려할 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²⁶⁾ 다양한 유형의 기사들 중 특히 사설은 정보

26) 한지완·김영옥. “코로나19 한국 대응 관련 국내 진보-보수언론의 외국보도 인용기사 비교 : 한국의 이미지 및 정체성 중심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05호, 2021, pp. 98-133.

전달의 목적이 있는 일반 스트레이트성 기사와는 달리, 언론사가 표방하는 정치적 관점, 입장, 견해를 수용자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사실은 여러 기사 유형 중 뉴스가 담고 있는 정치 담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을 밝히는 주장이나 논평 등과 같은 ‘의견 기사’로, 논조 분석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²⁷⁾ 따라서 각 언론사 사실에 담긴 논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인식에 대한 연대기적 변화를 발견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한중수교가 체결된 1992년 8월 24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정했다. 또한 분석 기간을 정권별로 구분하여 정권별 언론사의 보도 경향성과 담론 생산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기간을 노태우-김영삼 정권(1992.08.24~1998.02.24), 김대중-노무현 정권(1998.02.25~2008.02.24), 이명박-박근혜 정권(2008.02.25~2017.05.09), 문재인 정권(2017.05.10~2020.08.31)으로 구분하여 정권별 언론사의 보도 경향성과 담론 생산의 함의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사실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차적으로 선별하였고, 제목과 본문 내용을 포함하여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분석 기간 내의 모든 사실을 1차 분석 대상으로 두었다. 1차로 분류된 사실에서 드러난 주제, 기사 제목, 가치어, 키워드 등을 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언론사의 논조가 드러나는 사실을 2차적으로 선별하여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18년 이전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실은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기의 사실은 각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별도로 수집하였고 분석 대상 선별 방법은 동일하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은 2,798개로 언론사별 사실 개수는 <표 1>과 같다.

27) 최중홍·이호규, “정치적 갈등 이슈에 대한 신문 사실 프레임 및 국면 분석: 2019년 ‘조국 사태’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7권 2호, 2020, pp. 112~134.; 윤철수·김경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일간 신문의 정파성과 담론경쟁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48호, 2018, pp. 79~120.

〈표 1〉 분석 기간 내 정권별-언론사별 중국 관련 사설 보도 건수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합계
노태우-김영삼 정권	121	136	92	62	411
김대중 정권	58	46	33	53	190
노무현 정권	82	66	88	44	280
이명박 정권	52	144	120	53	369
박근혜 정권	61	176	127	67	431
문재인 정권	274	272	381	190	1,117
합계	648	840	841	469	2,798

2차적으로 선별된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모든 분석시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설의 메시지 프레임과 정권별로 언론사의 논조 변화를 분석하고자 했고, 각 시기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프레임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해 정권별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언론사마다 내부적으로 논조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정형성을 보이는 사설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프레임을 설정했으며, 각 프레임별로 참고할 수 있는 사설을 첨부하여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관련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하나의 사설이 두 가지 이상의 프레임을 포함할 경우, 드러나는 모든 메시지 프레임으로 중복 분류했다.

IV. 연구 결과

1. 노태우-김영삼(1992~1997): 한중수교 시작과 대(對)중국 보도 관점의 확립

〈표 2〉 노태우-김영삼 정권 언론사별-프레임별 사설보도건수

	시장/경쟁국	대북관계	패권국가	인권	환경오염
경향신문	26	51	38	22	4
한겨레	19	30	16	5	1
동아일보	26	58	38	27	10
조선일보	26	42	35	7	8
합계	97	181	127	61	23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 양국은 80년대 말부터 이어온 물밑 작업 끝에 한·중간 교류를 공식화하였다. 한중수교가 본격화한 1990년대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명백한 안보상의 위협이 발생했던 순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이러한 관계가 가능했던 것은 서로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수교 직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던 영역은 단연 경제 분야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과의 수교는 한국의 각 경제 주체들에게 ‘거대한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최대 규모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

나 한편으로 당시 중국은 반도체, 조선업 등 한국이 급성장하던 분야를 매우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는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수교 초기부터 한국 언론이 설정한 보도 관점 역시 ‘이중성’을 담아내고 있다. 예컨대 <동아일보>는 1995년 8월 24일자 사설에서 “중국과의 수교 전보다 교역규모가 2.6배 늘어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10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의 교역상대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듯 구체적 수치와 함께 수교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전형적 보도가 당시 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초기부터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수교를 우려하는 사설도 다수 발견되었다. <조선일보>는 1992년 10월 5일자 사설에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과속 기미를 보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경협도 중요하고 교두보 확보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경향신문>은 1992년 12월 14일자 사설을 통해 “무엇보다 중국을 얹잡아 봐서는 안된다”며, “미국 등 주력 시장에서 우리 제품은 중국산에 형편없이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겨레> 역시 1993년 11월 16일자 사설에서 “우리나라와 맺은 경제 관계로 보나 국제정치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중요성으로 보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동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을 단순히 기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협으로 경계하는 시각도 드러냈다.

한편, 한중수교는 동북아 정세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시적으로나마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한국 언론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중재자로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에 기대를 모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개혁 개방에 따른 성장과 발전에 다가선 중국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모방하여 북한 역시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남북관계 중재자로서의 이미

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북한과 관련된 이슈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형화된 프레임이라 할 수 있겠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중수교가 북한에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수교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한중수교로 인해 난처해진 북한의 입장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상세히 제시하면서 북한이 중국을 따라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자신 있게 내놓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역시 한중수교가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듯 한중수교 초기 언론들의 대중관(對中觀)은 진보·보수언론의 차이를 확연히 구분하기 어렵다.

한중의 수교는 짧은 시각으로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겠지만 결국에는 북한이 고립을 탈피하고 몇몇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공존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한반도 주변의 냉전구도를 평화와 안정의 구도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와 대만단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역사의 전환을 인식하는 것이다. (...) 북한은 이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도움을 청할 곳도, 행맹의 의로서 기댈 곳도 잃어버렸다. (...) 개혁-개방정책으로 역사 발전에 동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도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일보〉 1992년 8월 25일 “역사적 한-중수교”)

한·중 수교는 우선 북한을 개방사회로 나오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지금 한·중 수교의 충격으로 더할 수 없는 당혹과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다.(...) 중국이 한때의 교전당사국인 한국과 화해하는데 한 핏줄인 남북한이 공존·공생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 (〈경향신문〉 1992년 8월 25일 “한·중 수교이후의 과제”)

한 - 중 수교가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다시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는 점은 쉽게 상정할 수 있다. (...) 한 - 중 수교가 일본을 자극하고 나아가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촉진시킬 것은 분명하다. (〈한겨레〉 1992년 8월 25일 “한 - 중 수교와 동북아시아 질서개편”)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 중국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관점 확립에 영향을 준 또 다른 맥락은 미·중 사이에 처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당시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유일한 패권국으로 남아있던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고자 하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운명과 동북아에서의 운신의 폭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 한국의 관심은, ‘과연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였으며, 이러한 고민이 당시 언론보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오늘날까지도 제기되는 “미·중 갈등 구도에서 한국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라는 지정학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질문이 한중수교 초기부터 이미 예측된 이슈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의 사설은 정치·경제 영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바로 알고 이를 통하여 중국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함과 동시에 중국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조선일보>의 표현대로 아직 중국은 ‘미완의 대국’이지만, 향후 중국이 얼마든지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점

에 대한 우려가 내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에 깔린 전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에 견줄만한 국가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지위에 걸맞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중국이 패권의 지위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겨레>의 사설에는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기존의 패권이었던 미국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균형자론’ 주장이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 역시 중국이 미국과 견줄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을 요구하고,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오늘의 세계질서 속에서 본다면 중국은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많은 인구를 가진 잠재적 대국이기는 하나, (...) 중국 스스로가 선진적 경제기반의 구축을 위해 50년 내지 100년 정도의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완의 대국이다. (<조선일보> 1992년 8월 31일 “중국을 바로 알자”)

(...) 미국과 중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두 강대국의 관계 개선에 참되게 기여하려면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겨레> 1993년 11월 21일 “한-중 우호 증진의 계기로”)

한중수교 초기 보도된 사설에서는 언론사 간 상반된 논조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특히 언론사들 모두 ‘천안문 사태’나 ‘티베트 사태’와 같은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비판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인권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이

견을 드러낸다. <동아일보>는 1994년 3월 16일자 사설에서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외치고 있다”며 이념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 역시 1994년 9월 19일자 사설에서 “오늘날 인권은 인류 공통의 관심사”라며, “체제 유지를 위해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1996년 3월 28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중국 인권문제 규탄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 아닌 중국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한겨레> 역시 1997년 11월 1일자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천안문 사태와 티베트 종교자유 보장 문제 등 중국 내 인권 문제에 관한 확연한 견해 차이로 인해 입씨름도 벌어졌으나”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재확인을 비롯해 굵직한 합의를 끌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보수언론이 중국에서 불거진 인권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반해, 진보언론은 미중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입장표명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리하면,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 언론은 한중수교를 계기로 중국을 조명하는 보도를 본격화하였고 언론사별로 관점과 논조를 확립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이 관심을 두고 조명하기 시작한 중국은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 아닌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인식된 측면이 분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중적 인식’이 확립되었고, 이는 이후의 한국 언론이 중국을 보도하는 관점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경제 영역에서 우리의 ‘시장’이었음과 동시에 ‘경쟁자’였으며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잠재적으로 남북관계의 ‘중재자’이자 동북아의 ‘패권국가’였던 셈이다. 한편, 보도 관점의 정형화 과정에서 비롯된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한 언론사 간의 상반된 논조는 이후 정부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달라지는 논조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 : 진보 정권의 등장과 보수/진보언론의 논조 양극화

〈표 3〉 김대중-노무현 정권 언론사별-프레임별 사실 보도 건수

	시장/경쟁국	대북 관계	패권국가	인권	중국산 제품 불신
경향신문	40	33	43	37	7
한겨레	13	33	19	36	4
동아일보	26	13	30	16	4
조선일보	55	17	31	37	3
합계	137	96	123	126	17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는 헌정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진보 정권이 집권한 시기로 보수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우선 김대중 정부 시기는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당시 언론보도에도 그러한 복잡성이 반영되었다. 경제 영역의 경우 유의미한 논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에 형성된 프레임이 언론사별 고유한 논조로 정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기 경제 영역과 관련한 이슈는 중국의 WTO 가입, 마늘 관세 분쟁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베이징 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해당 이슈에서 언론사들은 기본적으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각을 드러냈는데, 이는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었던 부분이다. 아울러 외교·안보 영역과 관련한 이슈로는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공중 충돌 사건 및 오인 폭격 사건 등에 따라 심화하는 마·중 갈등, 김정일의 방중에 따른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등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이슈에 대한 언론사들의 사설에서도 잠재적인 남북관계 중재자로서의 중국과 패권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기, 대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했던 이슈는 ‘탈북자 강제 복송’ 사건이었다.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거부하고, 북한으로의 강제 복송을 선택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자 복송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는데, 당시 언론사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²⁸⁾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보수언론은 인도주의를 따르지 않은 중국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반면, 진보언론은 북한과 범죄인 인도 협약 관계에 있는 중국의 ‘난처하고 복잡한 입장’을 일부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 또한 일부 이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우를 거부한 중국을 강한 수위로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중국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도 중국의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이슈라는 점도 언급한다. 이같이 중국의 난처한 처지를 언급하는 부분은 보수언론의 사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진보언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겨레>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관된 태도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 대신 나선 민간 인권단체의 탈북자 관련 활동에 우려를 표하며 이들의 활동이 촉발

28)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동아일보』 2000년 11월 16일.; “공관(公館)침입에 ‘상호 유감’이라 니,” 『조선일보』 2003년 06월 23일.; “무기력 드러낸 ‘탈북자 외교,’” 『경향신문』 2000년 01월 15일.; “중국대사의 비외교적 발언,” 『경향신문』 2000년 11월 18일.; “중국의 무례한 비자발급 거부,” 『한겨레』 2002년 01월 08일.; “탈피해야 할 저자세 외교,” 『한겨레』 2002년 06월 25일.

할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탈북자들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면 큰 나라답지 않은 속 좁은 행동이다. (...) 한국정부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가. (<동아일보> 2002년 3월 21일 “‘탈북자’ 왜 공식 거론 못하나”)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해온 한국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체포해 장기간 구금 중이거나 재판에 회부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을 외면한 처사다. (<조선일보> 2002년 6월 28일 “인권 활동가 투옥한 중국당국”)

한국 정부도 중국과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갈등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당당히 협상하는 성숙한 외교를 펼쳐주기 바란다. (...) 탈북자 지원단체는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믿지만 만에 하나 북한 정권 붕괴의 수단으로 탈북문제를 접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경향신문> 2002년 6월 13일 “中, 탈북문제 현실 인정해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 공관에 뛰어드는 탈북자 처리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을 우리도 잘 안다. (...)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된다는 미적지근한 태도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다. (...) 이참에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풀 근본적인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한겨레> 2002년 6월 15일 “주권 유린한 중국, 사과하라”)

이처럼, 김대중 정부 시기 탈북자 강제 복송 이슈를 놓고 보수언론과 진보 언론 사이의 논조 차이는 명확하다. 그러나 당시의 논조 차이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과 가치의 차이보다는 한중수교 이후부터 점차 확립되어 온 중국에 대한 각 언론사의 고유한 관점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논조의 차이가 이념 대결이나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김대중 정부 시기 언론사들은 개별 이슈마다 실로 다양한 관점을 사설에 담아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언론도 중국이나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적 관점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이후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서 변화를 보이게 되는 지점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는 여러 면에서 보수-진보언론 사이의 이념적 대립이 본격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보수언론은 중국에 대한 입장보다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언급하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보수언론의 태도 변화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언론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정부와 보수언론 사이에 형성된 ‘대립 구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 2002년 4월경부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인 기사와 사설을 다수 생산했고, 이러한 논조는 참여정부 5년간 지속되었다²⁹⁾. 정부와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보수언론들은 대통령의 행보나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하여 사사건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보도하고 재현함에서도 정부와의 대립 구도에서 사설을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자주 외교’나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대표되는 외교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같은 정책의 핵심은 당시 미국으로 기울어져 있던 외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맞춰졌다. 보수언론은 이러한 정부의 외교 정책을 ‘친중반미(親中反美)’로 규정하고 이 기조를 강하게 비

29) “노무현 후보, 정말 왜 이러는가.” 『동아일보』 2002년 04월 07일.; “이런 식 ‘언론과의 긴장관계’라면.” 『동아일보』 2003년 03월 16일.; “지금이야 언론과 싸움할 때가.” 『동아일보』 2003년 08월 03일.

판하는 견해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부정적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었다.

‘친중반미’에 대한 경계 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과거 탓’ 말고 중국의 ‘한국 배우기’를 보라”, “한국형 사회주의의 우울한 내일”과 같은 사실을 통해 그동안 보수언론 자신들이 비판해왔던 ‘사회주의 이념 체제’에 중국보다 한국이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국을 한국 정부가 “보고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즉,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수언론이 촉발한 논조 변화의 양상과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상승하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 빈도가 증가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고구려 역사 왜곡’ 이슈에서 이러한 양상이 잘 드러났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동북공정 관련 사실을 분석한 결과, 비판의 초점이 역사 왜곡을 촉발한 중국을 향해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친중 바람’으로 일관하며 ‘중국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던’ 한국 정부를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사실에서 중국은 보수언론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일종의 ‘재료’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대사관을 4대문 밖으로 내보낸 것을 친중 정책과 연결하여 ‘망국의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국민감정을 자극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사실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지만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무엇보다 동북공정 이슈의 책임은 고구려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에 있으며, 중국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인 대중 인식’, ‘당당한 동반자 관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며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조를 보인다. 이는 정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 보수언론의 논조와는 분명 구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고,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기에 이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나오는가. (...) 미국 대사관을 4대문 밖으로 내보내면서도 중국 찬가를 불러온 게 이 정권이다. 나라 꼴이 오죽했으면 주변으로부터 이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가. (...)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망국의 씨앗이다. (〈조선일보〉 2004년 8월 6일 “중국 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였기에”)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중국 쪽에 있다. 따라서 문제를 풀 책임도 전적으로 중국 쪽에 있다. 수교 12돌을 맞은 한-중 관계는 중국 쪽이 이 문제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겨레〉 2004년 8월 24일 “타협해선 안 될 고구려사 왜곡 시정”)

노무현 정부 시기 보수와 진보언론의 논조 차이는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두드러졌다. 당시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에 입각한 ‘자주 외교’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노무현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제 외교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보수언론은 강하게 반감을 표출했다. 이들 비판의 핵심은 이른바 ‘친중반미(親中反美)’에 대한 경계, 즉 “지나치게 중국 편으로 기운 나머지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재현되었고, 그 너머에는 사실상 사실의 핵심이자 주된 비판의 목적이었던 바, ‘얼치기 자주’, ‘눈치보기 외교’, ‘자폐적 자주 의식’ 등의 표현으로 알 수 있듯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의도가 있었다.³⁰⁾ 반면, 한중수교 이후 줄곧 “한국은 미·중 양국 중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유지해오던 진보언론은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던 자주 외교의 방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다만, 정부의 인식과 방향성에 대한 진보언론의 지지는 양국 사이에서 철저한 균형을 강조하던 성격의 것이었기에,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을 한 경우에는 보수언론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판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보수언론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친미 외교를 주장한 반면, 진보언론은 친중과 친미 모두를 경계하며 정부의 균형감 있는 외교를 당부하는 차원의 사실이 대다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 정권은 더 나아가 친중탈미(親中脫美)를 노골화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6월 일본 방문 때 ‘앞으로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나라’로 미국보다 중국을 꼽았다. (...) 2004년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 의원의 63%는 “중국이 미국보다 중요한 외교 상대”라고 합창했다. (...) (〈동아일보〉 2006년 9월 8일,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정부 사람들은 중국과 손잡고 미·일의 대북 압박에 맞서 보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한국이 내민 손을 못 본 채하고 미·일의 손을 잡은 것이다. (...) 나라 꼴이 100년 전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그때는 무능한 왕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무엇 때문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조선일보〉 2006년 11월 22일, “미국, 북핵 파트너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꾸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나타나듯 당시 보수언론은 정부를 향

30) “중국의 내정간섭, 묵과할 수 없다.” 『동아일보』 2004년 06월 02일.; “‘美日과의 거리’ 확인한 韓中 정상의 북핵 논의.” 『동아일보』 2006년 10월 14일.; “결단하고 행동할 때다” 『조선일보』 2003년 12월 31일.; “중국이 벌써 한국 국회의원까지 협박하나.” 『조선일보』 2004년 06월 02일.; “중국 카드로 미국 견제 전략이라면 착각이다.” 『조선일보』 2006년 07월 23일.

해 상당히 높은 수위의 비난을 이어갔다. 노무현 정부 시기 보수언론의 ‘친중 반미’에 대한 비판 사설은 상당수가 중국과 한국 정부를 부정적 동반자로 동일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진보언론은 정부의 자주 외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은 표면적으로 ‘대중 종속 외교’를 비판하고 있지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친미’가 아니라 ‘균형 회복’임을 볼 때 단순히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균형외교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 역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지극히 타당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자주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일관되게 균형 외교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균형과 원칙을 잃은 대중 종속외교는 대미외교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중국에 옮겨놓은 것 같다. (...)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다. 외교에서 그런 환상은 금물이다. 그렇다고 ‘반중(反中)’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무분별한 중국 때리기와 그에 편승한 한국 민족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경향신문> 2004년 8월 24일, “한·중수교 12년 왜 위기 맞았나”)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인 미국의 세계 전략인 ‘전략적 유연성’ 구상은 존중하되, 우리 운명과 직결되는 동북아 지역 개입은 용인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자칫하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곤혹스런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노 대통령의 우려와 발언은 지극히 타당하다. (<한겨레> 2005년 3월 10일, “‘전략적 유연성’ 우리 국익이 우선해야”)

노무현 정부는 보수와 진보언론 사이의 논조 차이가 본격화된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조의 차이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정부와 대립 관계에 있던 보수언론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견지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보도하던 기존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 보수언론이 보도한 중국에 대한 비판적 사실의 목적은 사실상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중국은 외교적 대상 국가로만 다뤄졌다면,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는 주로 보수언론에 의하여 국내 정치 상황 및 맥락과 연계되어 다뤄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국내 뉴스에 중국이 더 자주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이명박 - 박근혜 정부(2008~2017) : 중국과의 갈등 고조와 혐중 담론의 대중화

〈표 4〉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사별-프레임별 사실 보도 건수

	시장/경쟁국	대북 관계 (공산국가)	패권국가	인권	환경오염
경향신문	19	44	40	10	0
한겨레	19	44	42	12	3
동아일보	69	143	74	32	2
조선일보	48	117	63	13	6
합계	155	348	219	67	11

새로운 보수정권의 시대를 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의 변화와 더불어, 글로벌 패권국가로 급부상한 중국의 위상 변화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갈등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이 중국 관련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이전 시기와

차별화되는 프레임은 ‘북한과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로서의 중국’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전의 대북 관계의 측면에서 제시된 보수·진보 언론 간 미세한 논조 차이가 극대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천안함 사건’과 박근혜 정부 시기 ‘사드 배치’ 정국에서 해당 프레임에 기반 한 사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보수언론은 중국을 주로 공산주의 이념·사상 등과 연계하여 보도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진보언론은 중국의 대북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지만, 비판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진보언론은 중국을 주요 외교 대상 국가 중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철저히 ‘국익’의 측면에서 대중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언론은 중국을 ‘공산주의’ 이념을 북한과 공유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사회의 반공 담론에 기반 한 ‘경계’의 관점에서 평가했다.

보수언론이 대표적인 두 사건에서 재현한 중국의 모습은 ‘북한의 후견인’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천안함 사건 당시 보수언론은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데,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을 규탄해야 한다”는 명백한 논조의 사설을 보도했다. 반면 진보언론은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선불리 중국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사드 배치 국면에서도 보수언론은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 중국은 이런 상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낸 반면, 진보언론은 “사드 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오히려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조의 사설을 보도했다. 특히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내 정치인들을 ‘좌파’라는 이념적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진보언론은 오히려 이러한 보수언론의 태도를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즉, 당시 중국에 대한 논조는 결국 이념적 관점에 종속된 것이라 하겠다.

중국은 북-중 혈맹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천안함 사태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이 북한의 요구만 들어주고 천안함을 비켜간다면 국제 사회는 북-중을 한통속이라고 볼 것이다. (〈동아일보〉 2010년 5월 4일, “중국, 천안함 사태 속에 김정일과 포옹할 건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북한을 지목하지도 못한 채 심증 혹은 추정에 의해 북한의 행위로 의심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 특히 중국이 대북압박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엔의 대북 제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경향신문〉 2010년 5월 16일, “천안함 대응, 한·중·일 갈등 불씨 안돼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정부 차원으로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 세계가 '공인'한 강대 범죄 집단과 나란히 서서 '우호'를 강조하는 중국을 보면서 폭력적 사드 보복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 2017년 3월 4일, “中, 對北 송유관 끊어 北核 없애면 사드 자동 해결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일부 보수신문들도 한몫 거들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몰아붙이며 비난하기 바빴다. (...) 합리적인 상황 분석과 충고로 정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판단착오를 부추겼다. (〈한겨레〉 2017년 3월 5일, “중국 보복의 피해, 박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이 시기 보수언론이 중국을 비판하기 위해 동원하는 키워드는 주로 ‘북한, 공산당, 좌파, 운동권’과 같은 이념적 표현들이었다. 이는 진보언론의 중국 비판 사설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를 통해 보수

언론은 중국을 비판함에 있어 북한과 공산주의 사상을 연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진보언론은 중국을 보도함에 있어 이념적인 프레임을 동원하는 보수언론을 비판하면서, 그와 같은 행태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각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중국의 모습은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통제 사회라 할 수 있다.

한중수교 이후 여러 면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나는 사실도 다수 보도되었다. 이것은 ‘패권국가’와 ‘경쟁국가’라는 중국에 대한 이중적 프레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패권국가 프레임에서는 중국이 ‘G2’로 대표되는 국가로 성장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경제·외교·안보·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닥쳐올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하고,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을 지혜롭게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G2’로 성장한 중국이 대국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반면 경제 프레임에서 시장으로서의 중국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경쟁국으로서의 중국은 우리나라가 경계해야 하는 국가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와 유사하게 패권국가 프레임에서도 패권으로 부상한 중국을 한반도에 이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중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을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G2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있다. (...) 중국의 성장을 외부 세계가 위협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빌미를 중국 스스로 제공한 게 사실이다. (...) 중국은 G2의 위상에 맞게 세계질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동아일보〉 2009년 9월 29일 “건국 60년에 세계를 움직이는 중국”)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은 올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중국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안으로는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밖에서는 위안화 절상에서 민주화 요구에 이르기까지 서방국들의 파상공세가 만만치 않다. (〈한겨레〉 2010년 10월 20일 “방향전환 시동 건 중국, 국제적 책임 다하길”)

반면, 중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의 다른 축을 형성하는 ‘경쟁국으로서의 중국’이라는 프레임에 기반한 사실들도 많았다. 모든 언론사는 공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잘 이용해야 하며,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경제 위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고 수출 상대국을 다각화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IT,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추격을 가속화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가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비교적 초기였던 만큼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보다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일반적 수준의 문제 제기가 사실의 주를 이루었다. 중국에 대한 비판과 한국의 대비를 촉구하는 논조는 각 언론사 모두에서 공통되게 드러났으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큰 틀에서는 ‘경쟁국으로서의 중국’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보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작년 중국에 1831억달러를 수출해 일본(1623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 대중(對中) 수출국이 됐다. (...) 그러나 세계 무역 1위로 올라선 중국이 불려올 경제·외교·군사 분야의 파고(波高)는 언제든 대한민국 경제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 우

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위험한 측면은 놓치고 있지 않은지 국가적 차원에서 짚어봐야 할 때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3일 “세계 1위 올라선 중국의 ‘무역 패권’에 대비할 때”)

중국의 오염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넘어오는 사례가 잦아졌으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는 중국발 비중이 30~50%에 이른다고 한다. (...) 중국의 수천만가구가 며칠 전부터 화석연료를 때기 시작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겨레〉 2013년 11월 20일 “중국발 미세먼지에 적극적인 대책을”)

4. 문재인 정부(2017~2020): 진보 정권의 재집권과 혐중(嫌中) 담론의 확산

〈표 5〉 문재인 정권 언론사별-프레임별 사실 보도 건수

	시장/경쟁국	대북 관계	패권국가 (미·중 분쟁)	감염병 진원지	환경오염
경향신문	77	75	92	19	6
한겨레	30	51	65	31	5
동아일보	70	49	102	26	12
조선일보	125	132	126	72	8
합계	302	307	285	148	31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는 이전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 온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화되자, 국민들의 ‘반중 정서’도 상당히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에 요구되었던 역할은 무엇보다 사드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는데,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 노력이 전개되면서 경제 보복이 다소 완화되고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었다. 또한 그동안 이른바 ‘정치적 보수’와 ‘경제적 보수’ 양측을 핵심지지 기반으로 삼아왔으나 대통령 탄핵과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논조의 변화가 불가피했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리해서 중국을 보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치 정국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거의 1년 주기로 열렸던 이 회의는 사드(THAAD)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 합의 성과를 접어들더라도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를 되돌아볼 때 두 나라 경제수뇌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 정부는 안보 문제와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원원’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2018년 2월 3일 “21개월 만에 머리 맞댄 韓中 경제수뇌, 양국 ‘원원’의 길을”)

사드 배치 이후 뒹뒹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풀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31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한겨레〉 2017년 10월 31일 “한-중 ‘사드 해빙’,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발판 되길”)

〈동아일보〉는 한-중 간 정부 당국자, 특히 경제 수뇌부가 만나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되어 있었던 양국 간 경제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

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이전 정부에서의 인식과는 다소 상반되는 모습이다. 〈한겨레〉 역시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한·중 관계의 복원을 위한 일종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교류가 제한적이거나 재개되고, 사드 배치 정국이 매듭지어져 감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사실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사이의 양극화된 보도 관점과 논조의 경향이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사드 배치 정국 이후 중국과 관련하여 부상하였던 굵직한 이슈로는 크게 ‘남북정상회담’과 ‘미·중 무역분쟁’이 있었는데, 양극화된 보도 관점과 논조의 경향은 이 두 가지 이슈에서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두 가지 이슈는 특히 한중수교 이후부터 한국 언론이 견지해온 ‘이중적 인식’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인식이,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무리한 요구를 우려하는 인식이 사실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는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와중에도 중국은 끝내 한국 정부의 기대처럼 남북관계 중재자의 역할을 거부했고, 결국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점차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고, 두 패권국가의 대립은 한국 사회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언론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지나치게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판단 하에 형성된 논점이라 하겠다. 반면 진보언론은 철저한 균형 외교의 관점에서 미·중 어느 쪽으로도 편중되지 않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적절하고 균형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은 양측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바이나, 각 언론이 지향하는 균형의 중심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 사실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은 중국의 사드 보복 때 나왔어야 했다. (...) 새 정부는 중국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당시 중국의 보복은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었지만 끝내 제소하지 않았다. 그러다 중국보다 국력이 압도적으로 큰 미국을 상대로는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8년 2월 20일 “中엔 침묵하고 美에 결연히 대응한다는 文 대통령”)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두 강대국 간 무역분쟁이 점차 패권대결 양상을 띠게 되면서, 한국에 ‘너는 누구 편이냐’ 선택을 강요하는 압력이 본격화하는 국면이다. (...) 미-중 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전략적 처신과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다. (〈한겨레〉 2019년 6월 6일 “미-중 갈등 어느 편이냐, 선택 강요당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이전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징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혐오 담론, 곧 ‘혐중 담론’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혐중 담론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에 호소하고 그러한 정서를 추동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혐중 담론이 표면화하고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였지만, 반중 정서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선 분석과 같이 한중수교가 공식화된 순간부터 중국에 대한 언론의 인식은 ‘이중적’이었다. 중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이러한 반중 정서는 중국에 대해 부여된 이용 대상과 경계 대상이라는 이중 정체성의 사이에서 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중수교 이후 반중 정서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던 이슈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불량 먹거리 음식 파동, 동북공정, 사스(SARS)와 같은 중국발 감염병의 창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와 단속 해경에 대한 폭행 및 살인 사건, 중국발 미세먼지 등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 사건과 이슈들이 한중수교 이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반중 정서가 형성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누적되어온 반중 정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언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생산된 반중 보도들과 뒤섞이며 혐중 담론이 정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이러한 혐중 담론은 양적/질적으로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는데, 양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생산된 중국 관련 사설이 이전 정부의 3배(3년간 1,117건)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질적으로는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COVID-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점에, 관련 보도에 사용했던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고집했던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TO)를 비롯한 감염병과 방역 전문가들로부터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적절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보수언론은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지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의도적으로 지속했다. 예컨대 <동아일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병기할 정도로 그 명칭에 집착했다.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이 가져온 효과는 “전 세계를 감염병의 위험에 놓이게 한 주체가 바로 중국이다”라는 인식의 확산을 가능케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반중 정서가 상당히 확산하여 있는 가운데 곧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에 충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적절성 제기에 오히려 반박하는 논조를 보이며 “중국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부적절성 제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진보언론은 보수진영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표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그것이 보수언론에 의해 혐오 담론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를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으로 직접 정의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부터 이어져 왔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사이의 중국에 대한 인식 양극화를 드러내는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질병본부도 아니고 청와대가 나서서 ‘우한 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표기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뭔가. (...) 그런 정권이 중국에는 군사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3불 함의’를 해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도 안 한다. (...)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조선일보> 2020년 1월 29일 “‘우한 폐렴’ 反中 안되지만 與는 국민 건강 먼저 걱정하길”)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가 범람하고, 심지어 중국인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는 모양새는 우려스럽다. (...) 이번 사태가 발병지로 지목된 우한, 나아가 중국에 대한 혐오로 번지는 일부 양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일각에선 ‘우한 폐렴’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대주의’라 비난하는데, 지역 차별을 부추길 단어를 피하는 건 상식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한겨레> 2020년 1월 28일 “신종 코로나 공포 부추기는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을 우려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사이 논조의 균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양극화되었고, 그러한 양극화 양상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극대화되어 마침내 ‘혐중 담론’으로 이어졌다. 보수언론이 이러한 ‘혐중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한 배경에는 정권 교체에 성공한 진보 정권을 견제하고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와해되었던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실제 사설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중수교 이후부터 누적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슈들과 사건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반중 정서가 이미 한국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결론

중국은 역사적으로 정치·경제·문화·외교·안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다가오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밀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남북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다시 불거진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외교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각 진영을 대표하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네 언론사의 사설 보도를 수집한 후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는 한중수교 이후 한국 언론의 보도 관점이 형성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양국이 상호간 탐색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이슈들이 부상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언론사들의 선입견이나 논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당시 중국은 우리의 잠재적 시장이자 동시에 경쟁자였다. 다시 말해, 당시 언론사들은 중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으며, 이는 향후 한국 언론이 중국을 보도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이중적 인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는 진보 진영이 정권 교체에 성공함에 따라 보수언론의 논조 변화가 이뤄지고,

중국에 대한 변화된 보도 관점의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졌고,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표면화되었다. 그렇지만 ‘탈북자 강제 복송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진보와 보수언론 간 논조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언론사 간 논조 차이를 촉발한 보수언론의 논조 변화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본격화되었는데, 보수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과 중국 관련 이슈들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반면 진보언론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당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동조하며 비판적 지지를 보였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사 간 보도 관점의 양극화가 표면화한 시점은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라 할 수 있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언론사의 중국 관련 보도 관점과 논조의 차이가 이전보다 더 양극화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당시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이전 정권보다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이 두드러졌으며, 반공주의와 같은 이념적 결집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수언론에서는 북한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중국을 공산국가라는 이념적 프레임화 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논조 변화의 관찰은 정권의 변화 따라 언론이 특정 국가에 대한 논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반면 진보언론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목적과 의도에서 중국 관련 보도를 생산하는 보수언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은 사실을 다수 보도하였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사 간 논조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또한 공고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기존의 반중 정서를 넘어 혐중 담론이 본격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보수언론이 중국에 대하여 확립해왔던 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 관점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탄핵으로 와해하였던 보수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

한 정치적 목적도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언론의 혐증 담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중수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연계된 다수의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반중 정서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대표 언론사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도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론은 언론이 정권의 변화에 맞추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보도 관점과 논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언론의 재현 전략은 과연 적절한 것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한국 언론의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언론보도의 토양 위에서 형성된 대중국 인식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러한 인식이 혹 가리거나 감추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과 기간 및 방법론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진보·보수 언론의 대중 담론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진보·보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³¹⁾은 설득력이 있다. 근대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적대적 민족주의 담론이 확대 재생산되어왔다는 사실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언론이 생산한 담론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 김희교, 『쟁개주의의 탄생』, 서울: 보리, 2022.

참고문헌

- 김영옥·이현승·장유잔·이혜진, “언론은 미세먼지 위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미세먼지 위험보도 프레임과 정보원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9권 2호, 2015.
- 김진호, “근현대 한국인의 중국 인식(認識)과 중국인의 한국 인식 변화.” 『중국문화연구』 제8호, 2006.
- 김희교, 『짱개주의의 탄생』, 서울: 보리, 2022.
- 박선미,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읽다.”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9권 4호, 2020.
- 박윤주, “미디어 모노컬처와 오리엔탈리즘: 한국 언론의 라틴아메리카 보도 행태 연구.” 『중남미연구』 제32권 2호, 2013.
- 배경환, “역사로 보는 한중 관계.” 『지식의 지평』 제9호, 2010.
- 서옥란·오창학, “한국 언론에 그려진 중국 이미지 연구: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46호, 2015.
-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2000.
- 오대영,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양상의 차이와 이유 연구: 뉴스주제, 보도량, 보도태도, 미디어 정보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61호, 2013.
- 왕천·서상호, “한국 텔레비전 뉴스의 중국관련 보도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4호, 2012.
- 윤철수·김경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일간 신문의 정파성과 담론경쟁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48호, 2018.
- 이장환·고성훈·김성해, “언론에 재현된 ‘동아시아’ 담론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기획연재를 중심으로.” 『담론 201』 제16권 2호, 2013.
- 장영태·양철, “한중수교 당시 국내 인식에 관한 연구: 1980-1990년대 국내 언론의 사실과 삽화 분석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4권 4호, 2017.
- 주재원,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반공 담론 연대기.” 『언론과 사회』 제25권 3호, 2017.
- 차정미,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한 이념의 영향.”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 최원석·반현, “공중 의견과 행동에 대한 의제설정 효과 모형의 검증.” 『한국언론학보』 제50권 1호, 2006.
- 최중홍·이호규, “정치적 갈등 이슈에 대한 신문 사실 프레임 및 국면 분석: 2019년 ‘조국 사태’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7권 2호, 2020.
- 홍주현·손영준, “사드 루머(THAAD rumor) 보도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정파성: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4호, 2017.
- 한지원·김영옥, “코로나19 한국대응관련 국내 진보?보수 언론의 외국보도 인용기사 비교: 한국의 이미지 및 정체성 중심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05호, 2021.

- 황인성, “텔레비전의 마이라크 전쟁 보도와 미국식 오리엔탈리즘: KBS 텔레비전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8권 3호, 2004.
- Berger, P. L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Anchor Books, 1966.
- Chang, Tsan-Kuo, “All Countries not Created Equal to be news: World System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25, No. 5, 1998.
- Hurwitz, Jon, and Mark, Peffley, “Public Images of the Soviet Union: The Impact on Foreign Policy Attitude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2, No. 1, 1990.
- Soh, H., “The Image of Foreign Countries Represented in U.S. Magazine Advertising.”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5, No. 2, 2008.
- Jiang, KE, George, Barnett, and Laramie, Taylor, Laramie, “Dynamics of Culture Frames in International News Coverage: A Semantic Network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0, 2016.
- Joo, Jaewon,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Discrimination: The Representation of Migrants in the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News.”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Vol. 24, No. 2, 2015.
- Said, Edward, *Covering Islam: How the Media and the Experts Determine How We See the Rest of the World*. New York: Pantheon Books, 1981.
- Shaheen, Jack, *Reel bad Arabs: How Hollywood Vilifies a People*. Northampton: Interlink Publishing, 2012.

Abstract

The Chronicle of Korean Media Discourse with Chin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Jaewon Joo(Associate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202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is not only geographically close, but has historically influenced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diplomacy,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and is a powerful country that can exert substantial influence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particular, it is likely that this relationship will be maintained in the future as it has rapidly grown as a hegemonic country that divides the global market with the US. In this context, studying Korea's perception of China by analyzing the Korean media's tendency to report on Chin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be meaningful in many aspects. To this end, the editorials of four major daily newspapers which were reported from 1992 to 2020 were analyzed chronologically, and the trend of media changes and discourse on iss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differences in media perception of China according to the ideological tendencies of the domestic regime, the global situation, and each media's viewpoints, and recognized China as a country that is economically helpful but should be wary of politics, diplomacy, and ideology.

Key Words: China,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ternational News, Public Perception with China, Discourse, Reporting Trend, Representation

투고일: 2022년 11월 02일, 심사일: 2022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9일
--